

경영 데이터 왜곡한 인터넷 매체 ‘덜미’

언중위, 팩트 검증 외면한 파이낸셜투데이 ‘정정보도’ 결정

최근 특정 기업 경영 관련 데이터를 왜곡해 부진한 실적을 부각시키거나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일부 매체가 있어 주목되고 있다.

지난 6월 4일 인터넷신문 파이낸셜투데이에는 ‘한화건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보다 더한 분식회계 징후 포착’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고, 한화건설이 의도적으로 거짓공시를 하여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화건설은 즉각 반론답컴을 통해 “자사주를 제외한 유효지분율”이라고 명시한 주식을 제외하고 보도했다며 “악의적인 오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해당 언론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파이낸셜투데이의 보도는 회계 전문성이 부족했다고 치부하기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남게 한다.

먼저 기사를 쓴 기자가 평가자가 아니라 경제부장이라는 점이다. 소위 ‘데스크’라 불리는 편집국장 혹은 경제부장의 경우, 일선 기자들의 기사를 검증하고 걸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데스크가 오보를 낸다면 그 언론사의 팩트 검증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한 광고홍보담당 임원은 “공시자료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주식’을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광고덜’을 노린 악의적 오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이번 파이낸셜투데이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6월 5일은 한화건설의 500억원 규모 회사채 수요예측이 예정된 날이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회사채 모집을 앞두고 있어 잘못된 기사라 할지라도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노린 ‘악의적 오보’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미디어오늘도 ‘광고·협찬을 부르는 기사 유형 5가지’ 중에 하나로 ‘경영관련 데이터를 왜곡해 깎아내리기’를 꼽은 바 있다(미디어오늘 2015.1.23자 기사 참조).

일각에서는 최근 일부 인터넷 매체들이 외부 인사를

대표 또는 부사장급으로 영입한 이후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광고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구악 경향을 살려 부정적 기사를 작성하거나 또는 몇 년 지난 이슈를 재활용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자를 영입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는 것.

포털의 뉴스검색 제휴 정책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라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 최대 포털인 네이버는 700여개의 언론사와 뉴스검색제휴를 맺고 있는데 매년 제휴 언론사는 급증하는 반면, 저널리즘 이탈을 일삼는 매체에 대한 퇴출은 손에 꼽을 정도다.

언론사로서 최소한의 자체 팩트 검증 기능을 갖추지 못한 인터넷언론들이 우후죽순처럼 포털을 통해 기사를 노출하고, 이에 대한 반론이나 정정보도는 외면하면서 기업들이 입는 피해는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다.

요즘처럼 우리 기업들이 법인세를 인상, 무역전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 고조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악의적인 보도나 기사는 보다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K A A**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조정 결정에 따라 관련 기사에 대해 파이낸셜투데이에는 6월 28일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다.

